

# 총장중 야구부 학폭 ‘시끌’...학교·교육청은 ‘쉬쉬’

8명이 1명을 2년간 괴롭혀...수차례 구조신고 했지만 학교는 외면 학폭위 열렸지만 아무런 조치 안해...피해학생 학부모 결국 고소장 광주교육청도 미온적 대처...‘최속현 사건’ 계기 철저한 진상조사를

광주 총장중 야구부 내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청 등에 수차례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도, 외면했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최속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가 폭행·폭언을 견디다못해 관계기관에 신고했는데도, 쉬쉬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 최 선수를 절망으로 몰아갔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유소년 스포츠의 경우 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데, 초·중·고로 이어지는 구조라 진학이나 자녀 미래에 관한 불이익을 당할까 학부모조차도 눈치 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도움요청에도...은폐·축소 급급=광주 총장중 야구부 내 학교폭력과 관련, 피해학생측은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모른 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야구협동조합’의 최승표 대표는 1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

며 광주시교육청과 총장중 교사, 지도자, 학부모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대표는 호소문에서 “광주시 총장중 야구부 2학년인 A학생과 학부모는 지난 2년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면서 “학교와 감독 등은 피해 선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A학생은 동료 야구부 학생 8명에게 2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학교측은 피해 학생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래 야구부원들은 다른 중학교에서 전학은 A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대신, 운동 중 뒤에서 공을 던져 맞히고 욕설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갖은 폭력을 휘둘렀다. A학생 앞에서 부모를 욕하는 등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학교측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는 커녕, 가해자측 말만 듣고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고 가해자에 대한 선도나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A학생 부모가 재차 학생부장에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학교



‘우리야구협동조합’의 한 회원이 14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총장중 야구부 폭력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에 항의해서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아무런 조치사항 없이 결론났다. 다른 학부모들이 A군 문제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하자, 있는데도 없으며 제공을 미루기도 했다.

A군 학부모는 끝내 지난 2월 광주동부경찰에 성폭력 부분에 대해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재지위를 받은 상

태다. 피해 학생의 인권을 위한 학교측의 무지함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학교측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양측 입장을 듣겠다며 가해 학생측 학부모들과 피해 학부모를 한 자리에 불러모았다. “A학생이 거짓말로 학교에 신고를 해 오려라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다”, “애들 일인데 어른들이 나설 일 있냐”, “(성폭력을 안했는)데” 했다고 하니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고소하겠다”는 식의 막말을 들어야 했다.

◇교육청의 수준 낮은 인권 의식도 드

려나=피해 학생측은 이같은 학교폭력 내용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 내용은 또래 학생 2명이 고의적으로 A학생의 어깨를 부딪혔다는 내용과 관련, 야구부 감독이 부원을 전원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야구부 감독은 공개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 “같이 야구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물었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대해 공개적 자리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비밀 보장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사하는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안이한 인권 의식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총장중학교 야구부 감독도 “그날 조사는 A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평소 운동 전후로 인권 교육 등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조사했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 악취 진동 쓰레기더미 집에 방치된 6·7세 남매

식사도 제대로 못한 듯 야위어 신고 받고 아동보호기관 옮겨 광주남부경찰, 부모 입건

“온갖 악취가 집안에서 진동했고, 쓰레기 더미 주위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3시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직원들은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주택을 찾았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한 집안에서 어린 남매가 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에 따르면 악취는 집 정문에서부터 흘러 나왔으며, 방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생활쓰레기까지 수 년동안 치우지 않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현장조사팀 출동 당시 집 안에는 A(7·초등 1년)양과 B(6·유치원생)군, 친모인 다문화주부 C(27)씨가 있었다. 두 남매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듯 야위어 있었고, A양의 머리에서는 이도 발견되는

등 위생상태도 최악이었다.

남매의 친모 C씨는 현장조사팀이 자녀들을 데려가려하자 방문을 잠그고 버텼으나 경찰이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었다.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24일 ‘아이들이 불결한 환경에 방치돼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남매의 집을 방문했지만 “청소를 하겠다”는 부모의 말에 되돌아왔다. 하지만 더워진 날씨에 악취가 더욱 심해지자 재차 현장을 방문해 아이들을 보호기관으로 옮겼다.

남매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등원과 학교 등교가 중지되고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안의 쓰레기 더미는 친모가 쓰레기에 집착을 보여 남편이 버리지 못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진 남매는 밝은 모습으로 또래 아동들과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모에 대한 정신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월동 정복지센터는 15일 남매의 집 내부를 정



어린 남매가 살았던 집 안방이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 있다. <빛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남부경찰은 C씨와 친부 D(43)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 남부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학대

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수영장 공사현장 노동자 사망 사업주·현장소장 등 벌금형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떨어져 숨진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업체 사업주 A씨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공사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인 C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9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 D(54)씨가 추락방호망 해제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수영장 증축공사 현장 관람석 지붕 아래 추락방호망 설치·해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장비 없이 작업하다 추락해 숨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윤호21병원 화재 때 1층 출입문 안열렸다”

119 신고전화 녹취록 공개

30명의 사상자가 난 고층 ‘윤호21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 화재 당시 “1층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119 전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운(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병원 화재 당시 응급실 반대편 쪽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문이 안열리는데...”라며 “지하 쪽으로 대피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119와 통화했다.

강 의원은 녹취록 내용을 들어 “해당 출입문은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시설에 해당해 폐쇄하면 안 된다”며 “출입문 문제가 인명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에는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 바로 옆 출입문과 도로쪽으로 자동문과 여닫이 문 등 이중의 문으로 구성된 2개의 출입문이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러나 당시 병원 건물의 두 출입문은 모두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고흥경찰 관계자는 “한쪽 출입문은 처음부터 잠글 수 없는 구조이고 나머지 한쪽 출입문 잠금 여부는 수사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열려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례대표 투표지 찢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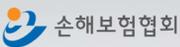
40대 집행유예 선고

비례대표 투표지가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조사를 받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른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는 명령도 같이 선고받았다.

A씨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시 북구 한 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에 비해 길다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절반으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투표지 훼손에 대한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찢고 “가죽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가 하면, 손소독제를 던지거나 소화기 등을 집어던질 듯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